

넷플릭스 잡겠는데 국내 CP가 반대하는 이유는 “망 품질 유지의무 부당 전가 우려”... CP 책임론 부상

(콘텐츠 사업자)

망 이용료 역차별 해소 법안 의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 업체
“국내 사업자 규제 부메랑” 염려
통신사업자와 갈등 점화 우려도

NETFLIX

올까 노심초사하는 모양새다.

국내 인터넷 포털 네이버, 카카오 등이 포함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국내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의 글로벌 CP 대책이 통신사 고유의 의무를 CP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며 “국내 사업자 규제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와 우리나라 CP, 스타트업 등 창업자들의 혁신의 날개를 꺾어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 약화만 가져올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망 이용료 갈등, 넷플릭스 vs SK브로드밴드 송전까지...이중과금이나, 무임승차나

망 이용료 갈등은 CP들의 몸집이 커지면서 트래픽이 급증하자 불거지기 시작했다. 동영상 위주로 서비스하는 해외 CP들은 ISP 전체 트래픽의 60~70%를 차지할 만큼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지만, 국내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지 않아 역차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

특히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OTT 이용 등으로 전세계에서 트래픽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ISP 측에서는 해외 사업자에 망 이용료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OTT 서비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 사용료 갈등이 소송전으로 불거지며 이슈가 된 바 있다. 넷플릭스는 ISP가 일반 고객에게 이용요금을 받으며, CP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이중과금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SK브로드밴드 측은 트래픽 유발량 규모는 CP가 결정하는데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무임승차라는 반박이다. SK브로드밴드는 최근 3년간 매년 8000억~9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또 넷플릭스는 국내와 달리 미국 컴캐스트, 버라

이즌, AT&T, 프랑스 오렌지 등 해외 ISP와의 분쟁 끝에 망 사용료를 지급한 바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넷플릭스 측은 “입법부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판단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ISP vs CP 갈등으로?...“국내 CP 부담 줄어든 것”

글로벌 CP들의 무임승차를 겨냥하는 법안이라면,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는 글로벌 기업 역차별 문제뿐 아니라 ISP와 CP 사이의 갈등을 점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이번 개정안에

반발하는 이유는 통신사의 망 품질 유지 의무를 CP에게 부당하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 기업들은 연간 수백억원을 망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CP의 국내 진출 등을 이유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ISP 측은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사업자 역차별을 위한 의도이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국내에서 네트워크 트래픽 이용량이 증가할수록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투자 부담은 CP가 아닌 ISP 사업자가 옳이 지게 되고,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 대한 요금 인상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CP 또한 이용자보호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게되면 오히려 국내 CP의 부담을 줄이고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자원을 통해 특히 국내 중소 CP와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 확보 등을 통해 국내 콘텐츠 생태계 발전에 선순환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쌍용차 ‘재기 안간힘’... 마힌드라·정부 SOS 탄력 받을까

내부에선 노사 ‘임금동결’
비핵심자산 매각 등 허리띠

외부론 정부 등 자금 확보 총력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 추진



쌍용차 평택공장 회사 전경.

장기간 신차 부재에 따른 부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장기화로 위기에 빠진 쌍용자동차가 생존을 위한 돌파구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쌍용차는 내부적으로 노사간 협력 강화를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한편, 외부적으로 유동성 확보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와 정부에 지원 받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미래 경쟁력 위해 자금 확보 집중

1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르면 이달 말 가동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마힌드라의 신규투자 계획 철회로 난관에 부딪힌 자금 조달 문제를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을 통해 해결하기 위함이다.

쌍용차가 신차 개발 등을 위해 앞으로 3년간 필요한 자금은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마힌드라가 지원하기로 한 금액은 400억원이다. 당초 약속했던 금액(2300억원)의 6분의 1 수준이다.

쌍용차가 성과급 반납과 자산 매각 등 자체 자금안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1000억원이다. 1700억원은 당장

급한 자금이 아니므로 필요 자금 5000억원 가운데 부족분은 2000억원 가량이 다. 쌍용차가 기금에서 지원을 기대하는 금액이기도 하다.

다만 쌍용차가 기금의 지원 대상이 될지는 미지수다. 4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쌍용차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쌍용차는 지난해 2819억원의 영업손실을 내 2017년 1분기(1~3월) 이후 지난해까지 12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물론 쌍용차의 위기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판매량이 급감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요 수출 지역인 유럽이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탓에 쌍용차의 4월 수출이 1년 전보다 67.4% 급감했다.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 이후 일자리 지키기에 힘쓰고 있는 점도 쌍용차가 기대를 거는 대목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에서 지원받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노사 협력 강화

쌍용차 노사는 글로벌 판매량 부진 등으로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9월 복지혜택 중단, 같은 해 12월에는 전 직원 임금 및 상여금 반납, 사무직 순환 안식년제(유급휴직) 등을 시행했다. 지난달 17일에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임금동결’로 조기 마무리했다. 11년 연속 무

분규 임단협 타결이다. 또 지난 5월 8일에는 노·사·민·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특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호 공동 협력해 나갈것을 약속했다.

쌍용차는 현재 추진중인 경영쇄신방안과 더불어 비핵심자산 매각 작업을 통한 단기 유동성 문제 해결은 물론 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주주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방안 모색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노사 화합 기류도 있지만 갈등을 겪으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위기감도 깔려 있다.

한편 쌍용차는 위기 돌파를 위해 내년 중형 SUV(프로젝트명 J100)와 전기차 등 신차 2대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쌍용차는 J100 출시로 이어있던 중형 SUV 라인업을 채우고, 중형 SUV 전차로 친환경차까지 라인업을 확대해 재도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달 초 예비태 쌍용차 사장은 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의 자금 지원 약속 철회로 회사가 최악의 비상사국에 직면했다면서 회사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 중단과 임금삭감 등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정부와 금융권에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예 사장은 “회사는 2009년 법정관리 이후 최악의 비상사국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와 금융권의 지원 요청을 통해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1면 ‘카드사, 오늘부터’서 계속

대형마트·유희업소 온라인 등 사용불가

또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유명 커피전문점 등 본사지역 프랜차이즈점의 경우 본사 소재지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 밖에 유희·사치업종 가맹점에서의 사용도 제한된다.

가맹점명으로 추정되는 업종과 실제 등록업종이 달라도 지 않게 긴급재난지원금 이용이 안 될 수 있어 카드 사용 후 휴대전화 문자, 카드사 앱 등을 통해 올바르게 사용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온라인 사기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사는 스미싱, 파밍 등 온라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등에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받으면 터치 또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신용카드를 부정 유통하거나 긴급재난지원금의 카드 사용을 이유로 가격을 달리 받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주 기자 hj89@